

## 보호동물 ‘예비 입양제’, 책임 있는 입양을 위한 제도입니다.

- 입양 전 최대 10일간 실제 가정에서 생활하며 동물과 가족의 적응 여부 확인
- 사전교육·입양자 확인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, 시범 운영을 통해 지속 보완

### < 주요 보도내용 >

9월 7일(월) 경향신문, 「유기동물 10일간 키워보고 ‘입양 최종 결정’ 우려 속 도입」 기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유기동물의 재유기 및 과양을 막기 위해 입양 전 최대 10일간 가정에서 보호동물과 생활한 후 최종 입양 여부를 결정하는 ‘예비입양제’를 시범 운영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.

기사에서 예비입양제가 입양 희망자가 실제 가정에서 보호동물의 적응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과 일정기간 함께 생활한 후 반환하는 방식이 동물을 물건처럼 다루는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습니다.

### <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>

#### 1. ‘예비입양제’는 단순히 동물을 체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.

예비입양제는 누구나 보호동물을 임시로 데려가 키워보는 제도가 아니라, 최종 입양을 전제로 실제 가정환경에서 보호동물과 가족이 서로 적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.

보호센터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확인하기 어려운 ▲동물의 성격·행동특성, ▲가족 구성원과의 관계, ▲기존 반려동물과의 적응 여부, ▲배변·산책 등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적응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이를 통해 입양 후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과양이나 재유기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 보호동물과 입양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.

## 2. 사전교육 등 안전장치를 통해 책임 있는 예비입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.

예비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은 사전에 입양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상습적인 사육 포기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입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또한 신청자격을 관할 지자체 주민으로 제한하고, 예비입양은 연간 최대 3마리 이내로 제한하는 등 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.

농식품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예비입양 및 반환 현황과 사유 등을 점검하여 단순 체험이나 무분별한 반환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.

## 3. 보호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하여 운영하겠습니다.

새로운 환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호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.

이에 따라 예비입양 기간 중 동물의 건강·행동 및 가정환경 적응 여부를 함께 살피고 반환 사유와 동물의 상태 등을 점검하여 현장에서 문제점이 확인되면 지자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방식을 보완하겠습니다.

## 4. ‘입양 활성화’와 함께 유실·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는 예방 정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.

유실·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는 예방정책과 보호동물이 안정적으로 가정에 입양될 수 있도록 입양비 지원, 동물보호의 날 행사 등 지원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, 동물보호단체, 전문가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보완하여 보호동물과 입양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책임 있는 입양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동물복지정책국<br>개식용종식추진단 | 책임자 | 과 장 | 최경철 (044-201-2280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임하덕 (044-201-2987) |